

‘무늬만 태양광사업자’ 망 계약 해지… 신규 사업자에 배분

산업부, 허수사업자 물량 1.7GW 대기 수요 많은 호남 먼저 접수하고 기타지역 1.4GW 내달까지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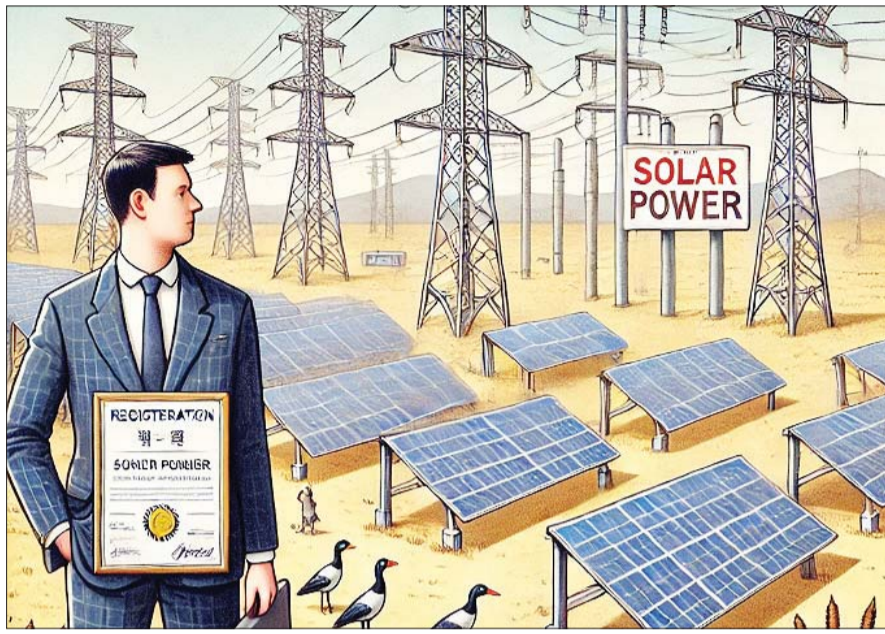
재생에너지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 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 물량이 신규 발전사업자 등에게 배분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1.7GW(기가와트)의 허수사업자 물량이 확인됐다.

허수사업자란 발전사업 허가와 전력망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간 발전설비 공사 등 일체의 발전사업 행위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다.

전력당국은 계약 체결 2년 이후 사업 실적이 전무한 허수사업자의 망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여기서 확보한 계통 여유물량은 전력망에 접속대기 중인 발전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물량이 남을 경우 신규 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망만 선점하



챗GPT가 생성한 허수 태양광발전사업자를 표현한 이미지.

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로 인해 후발 사업자들의 신규진입이 방해받고 있다”며 “성실사업자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허수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추진, 발생한 여유물량을 후순위·신규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대기 수요가 많은 호남권에서 확보한 여유물량 336MW(메가와트)를 13일부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한전on)을 통해 공개하고,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는 28일 0시부터 여유

물량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순으로 배분한다.

이어 3월 중 나머지 호남권 제외 기타 지역(1.4GW) 대상 후순위사업자 분배, 3월 말까지 잔여물량 대상 신규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기타지역 회수 용량은 강원권(533MW), 영남권(507MW), 수도권(325MW), 충청권(49MW) 순이다. 발전사 대상 설명회는 18일 오전 한전 경인건설본부(잠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수요보다 많은 발전설비가 전력망 보강 전에 진입함에 따라 계통수용용량 부족으로 인한 출력 제어 상시화가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호남지역의 경우 2023년 평균 부하는 6.2GW지만 상업운전 중인 재생에너지 설비는 11GW이며, 2031년까지 32GW 규모 발전사업 허가가 완료돼, 총 43GW 규모가 될 예정이다.

전력당국은 무탄소전원 확대 등 전원믹스 이행을 위해 전력망 투자계획을 대폭 확대 추진 중이나, 전력망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인 표준 공기는 9년(345kV 기준)으로, 단기간 내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전력망에 대한 낮은 주민 수용성,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전력망 적기 건설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허수사업자 물량 재분배 외에도 작년 11월부터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와 ‘계통안정화설비 구비 조건부 접속제도’를 운영 중이며, 향후 ‘송전망 건설지연시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등 다양한 조기접속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현재 한정된 전력망 여건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망 사용 효율화 등 NWA(전력망 건설 대안기술) 활용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기업 수출 12% 증가… 중견기업은 감소

통계청, 작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수출 10대기업 수출액 2503억 달러 중견기업은 전년비 0.7% 줄어 들어

지난해 대기업 수출은 10% 넘게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에선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수출 증가 폭은 5% 미만이었다. 대기업에서는 특히 반도체 등 전기·전자 부문이 수출 호조를 보였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대기업 수출은 전년 대비 11.6% 늘어났다. 2022년(+6.0%)과 2023년(-8.6%)과 비교해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중견기업 수출은 전년보다 0.7% 줄었다. 더욱이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수출은

4.7% 늘었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작년 상위 10대 수출기업 무역집중도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은 2503억 달러였다. 이는 전년(2077억 달러) 대비 20.5% 증가한 액수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무역집중도)은 지난해 36.6%에 달했다. 2018년(37.8%) 이후 6년 사이 비중이 가장 컸다. 비중이 전년도(32.9%)에 비해 3.7%포인트(p) 늘어났다.

수출 기업 수는 지난해 9만9181개로 전년(9만7224개)보다 2.0%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지난해 수출액은 도소매업(-1.8%), 기타 산업(-3.4%)에서 감소했으나 광·제조업(10.2%)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전자 등

반도체 경기 활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종사자규모별로, 지난해 수출액은 10~249인(-1.2%)에서 줄어든 반면, 1~9인(8.1%)과 250인 이상(10.3%)에서 늘었다. 재화성질별로는 원자재(-3.1%)에서 줄었으나 자본재(17.9%)에서 증가했고 소비재는 보험세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 같은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 증가와 무역집중도 증대는 반도체 수출 양대 산맥의 선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견기업 수출액 감소는 중동 지역에서 석유화학 공장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며 “중동 지역 기업들의 무기 화학물 등 화학공업 제품 수출이 늘어나며 우리 기업에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청년 영농정착 핵심요소 ‘스마트 농업’

송미령 농식품장관, 홍성 ‘옥토팜’ 방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청년들의 성공적 영농 정착 및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요소로 ‘스마트농업’을 꼽았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과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12일 오후 충남 홍성에 위치한 스마트팜 ‘옥토팜’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청년들과 함께 미래농업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서는 첨단 스마트농업 기술이 적용된 토마토 재배시설이 소개됐다. 이어 ‘스마트농업 확산과 청년농업인 지원 강화방안’을 주제로 2025년 농림축산식품

부 업무계획 3번째 릴레이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송 장관은 “스마트농업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요소”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농업인과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스마트농업 확산과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농업기계 및 자동화 지원 ▲전후방 농업인 창업기업 지원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지원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산업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5월 개설

청정수소발전사업자 간담회 열어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5월 개설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2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국내 주요 청정수소발전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

및 수소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2024년 세계 최초로 개설됐으며 작년 연 750GWh(기가와트시) 규모가 낙찰된 바 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작년에 처음 개설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대규모 청정수소 수요 창출 및 청정수소 가격발견에 의의가 있었다”며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우리

나라의 탄소중립과 청정수소 생태계 확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올해 입찰시장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5개 발전공기업과 SK이노베이션E&S, 한화임팩트, 포스코인터네셔널, 삼성물산, 롯데케미칼이 참석했으며, 전력거래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각각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청정수소인증 예비검토 컨설팅 추진 일정(안) 등을 공유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수거·재활용 추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약 연간 3000t 철·알루미늄 회수 전망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에 나선다.

전국에 수거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3000톤(t) 이상의 철, 알루미늄 회수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12일 경기 용인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론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순환거버넌스)과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순환이용 시범사

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시범사업은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효과적인 재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는 파쇄나 선별에 추가 비용이 드는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이 다량으로 포함돼 있어 재활용 업체에서 처리를 기피해 왔다. 또 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 대상도 아닌 탓에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러 군용기, 폴란드 영공 6.5km 침범…“항법 시스템 고장”
▲‘미국 관세 우려’ 속 중테무, 생산업체에 “美에 직접 배송”

▲이스라엘, 韓 ‘여행경보 하향’ 환영…“더 많은 관광객 오길”
▲中 부총리, 프랑스 시 정상회의서 “성과 공유하려 한다”

▲日정부,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신청…“필요한 대응 철저히 하겠다”
▲美 공화당 의원 ‘트럼프 야욕’ 그린란드 명칭 변경 법안 발의